



## 교육개혁 방향의 새로운 모색



이 천 수  
천안대 총장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두드러진 현상은 정보화·글로벌화 그리고 개혁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산업 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문명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이 각 분야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 모두는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이룩한 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만족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교육 분야 개혁에 있어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두뇌가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숭상하였고, 그 교육의 성과가 후기 산업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각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의 우리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성공했다고 평가받을만 하다.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여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고,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많은 유능한 인력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교육계로부터 이에 상응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점에 대한 반성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모두가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관하여 모든 국민과 각계 각층의 욕구나 불만을 완전히 수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나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현실 여건이나 민족적·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외국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이상적인

“

과의 교습 행위의 포괄적 금지야말로  
우리 사회의 법 만능주의,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 방향에서  
전면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적 발상이 주요한 정책이나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예이다.

”

제도만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나 너무 조급하게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가지 더 거론한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인 학부모나 관련 시민단체나, 교원단체, 심지어는 정부나 정치권이 교육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적인 요구와 규제 일변도로 교육정책을 강요하지나 않는지도 이 시점에서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지난해 4월,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을 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당시 언론이나 시민 단체나 학부모들은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과잉 반응, 과잉 보도, 비판 일색이었다. 정부나 정치권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과열 과외 방지를 위한 많은 대책들을 분주하게 발표하기도 하였다.

과의 교습 행위의 포괄적 금지야말로 그 동안 과열 고액 과외의 소득계층간 실질적 교육 불균등 문제 등 많은 비교육적 부작용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법 만능주의,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 방향에서 전면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적 발상이 주요한 정책이나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개혁,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할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과 내용, 절차와 방법, 국민의 교육관과 의식,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현실 여건, 법령과 제도의 문제, 시대 상황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총 점검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자세로, 백지 위에 새로운 구상과 계획을 그려보는 일대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의 틀을 이루고 있고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를 교육받을 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의 창의성 신장이라는 잣대에 맞추어 개정하고 모든 권위주의적, 산업 사회적 용어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용어로 개선하고, 극단주의적 정책, 완전무결함을 지향하는 용어, 처벌적 규제적 표현, 경직성 용어 등을 지양하고 교육이 우수한 우리 국민의 창의성, 도덕성 함양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대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 제도의 문제, 교육 과정 개편 문제, 인문과학 · 기초과학의 위기 문제 해결 등 많은 교육 현안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실질적 문제와 민주적 · 합리적 절차 등이 균형있게 고려되면서 그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호**